

국별 리포트

#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6.

|                    |    |
|--------------------|----|
| I. 일반개황 .....      | 2  |
| II. 경제동향 .....     | 3  |
| III. 정치·사회동향 ..... | 10 |
| IV. 국제신인도 .....    | 14 |
| V. 종합의견 .....      | 16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9,561 천 km <sup>2</sup> | G D P     | 82,402억 달러(2012년) |
| 인구   | 13억 4,800만 명            | 1 인 당 GDP | 6,115 달러(2012년)   |
| 정치체제 |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 통화단위      | 元 (RMB)           |
| 대외정책 | 전방위 실리외교                | 환율(달러당)   | 6.23 (2012년 말 기준) |

- 중국은 한반도의 43배에 이르는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로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한족 이외에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됨. 풍부한 노동력과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의 결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은 정책 기조를 종전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함.
- 2012년 뒤를 이은 시진핑(習近平) 정권도 내수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12년 미국, EU의 경기침체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7.8% 성장 달성

○ 소매판매 증가(14.3%), 고정자산 투자 증가(20.6%), 산업생산 증가(10.0%), 적극적인 정부지출(11.0%)로, '12년 중국 GDP가 7.8% 성장하여 51조 9,132억 위안(8조 2,402억 달러)을 기록

- '12년 아세안에 대한 상품 수출이 두자리 수 성장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회복세를 보인 반면, 대 EU수출(전체 수출의 18.8%)은 마이너스 성장함에 따라 '12년 전체 상품수출\*이 7.9% 성장하는 데 그침.

\* 연도별 상품수출 증가율(%): 31.6 ('10) → 20.3 ('11) → 7.9 ('12)

○ '1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7.7%로 전 분기(7.9%)보다 둔화하고, 5월 HSBC PMI 지수가 50이하(경기위축)를 기록함\*에 따라 '13년 연간 경제성장률도 전년과 같은 7.8%로 전망

\*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PMI지수는 '12년 10월 이후 9개월 연속 50이상(경기확장) 기록

- 중국 정부가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 성장률 둔화를 감내한다는 입장이므로, 높은 성장률 달성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펼치지 않을 전망이다.

#### □ 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정부지출로 '12년 재정적자가 GDP의 1.6%로 증가

○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 교육, 의료 등의 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정부지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보조금 지급으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증가(11.0%)하여 '12년 재정적자가 GDP의 1.6%를 기록

○ '13년에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민생개선과 질적 성장을 위한 지출 지속, 경기침체 시 신규 소비촉진책 마련 등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2.1%로 증가할 전망

□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12년 연중 물가가 2.6% 상승

- '12년에는 경제성장 둔화와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안정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중 2.6%를 기록

\*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 '12년): 4.5 (1월) → 2.2 (6월) → 2.0 (12월)

- '12년 하반기 이후 주요국 추가 금융완화에 따른 유동성 증가, 생산자물가 반등, 국내수요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 등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져 '13년에는 3.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 100대 도시 평균 부동산가격(위안/m<sup>2</sup>): 8,688('12.6)→9,715('12.12)→10,098('13. 4)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sup>f</sup> |
|------------|------|------|------|------|------|-------------------|
| 경제성장률      | 9.6  | 9.2  | 10.4 | 9.30 | 7.8  | 7.8               |
| 재정수지 / GDP | -0.4 | -2.2 | -1.6 | -1.1 | -1.6 | -2.1              |
| 소비자물가상승률   | 5.9  | -0.7 | 3.3  | 5.4  | 2.6  | 3.3               |

자료: IMF, EIU.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도농간, 지역간 빈부격차가 큰 편이나 균형발전전략으로 격차완화 추진

- 과거 연해지역 우선발전전략으로 인한 도농간, 지역간 빈부격차가 큰 편이나 2000년부터 동부지역 산업이 중서부로 이전하는 등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
  - '12년 1인당 농촌순수입 증가율이 13.5%로, 1인당 도시가처분 소득 증가율(12.6%)를 3년 연속 상회
  - 지역별로 보면 2000년 동부지역 소득이 서부지역의 3.01배에서 '11년 2.09배로 감소

- '12년 성장률 상위 10개 성 중 6개 성이 중서부 지역(평균 성장률 12.4%)으로, 상하이는 10위 밖으로 밀려나 11위를 기록함.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중부와 서부지역의 GDP비중\*도 증가하는 추세

\* 지역별 GDP 비중변화(% , '93→'11): 동부(60.0→53.1), 중부(18.2→19.7), 서부(21.8 →27.2)

#### □ 사회안전망 미흡으로 소비보다는 투자가 성장을 주도

- 투자 위주의 성장방식이 중복, 과잉투자를 유발하는 등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2007년부터 투자 위주의 경제 구조를 소비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 소득 재분배 등을 실시함. 이에 따라 민간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4.0%p('07) → 3.5%p('12)로,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5.3%p → 3.2%p로 변화
- 그러나 중국의 민간소비는 '12년 GDP의 36.3% 수준으로 미국(70.7%), 일본(57.1%), 인도(55.1%), 한국(54.7%)에 비해 현저히 낮음. 이는 사회안전망 미비로 국민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기 때문으로, 풍부한 저축을 바탕으로 투자가 여전히 GDP의 44.7%를 차지

#### □ 자원다소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

- 미국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소비는 일일 939만 배럴로 미국(1,977만 배럴)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석탄 소비는 세계 1위(22억 932만 톤)임. 이와 같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중국은 연간 미국의 1.4배에 달하는 7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 환경오염으로 전국 강 하천의 70%가 오염되었으며, 이 가운데 40%는 자정기능을 상실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별 미세먼지가 38~180  $\mu\text{g}/\text{m}^3$ , 중국은 인도(36~251  $\mu\text{g}/\text{m}^3$ ), 이란(70~372 $\mu\text{g}/\text{m}^3$ ), 파키스탄(181~251 $\mu\text{g}/\text{m}^3$ ), 몽골(279  $\mu\text{g}/\text{m}^3$ ) 등과 함께 미세먼지가 높은 국가로 분류됨.

\* 우리나라는 49~64  $\mu\text{g}/\text{m}^3$ , 미국은 6~38  $\mu\text{g}/\text{m}^3$

## □ 국유기업 중심 경제로 비효율이 만연

- 중국은 경제활동의 주체가 주로 국유기업으로, 2011년 포춘(Fortune)지 선정 Global 500에 포함된 61개 중국기업 중 민간기업은 3개에 불과
  - 중국 국유기업의 생산성은 민간기업의 1/3에 불과하고, 국유기업의 1/4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유기업은 정부와의 유착에 따라 부정부패의 위험이 상존
  - 특히 금융시장이 국유은행 위주(전체 위안화 대출의 55.2%)로 이루어짐에 따라 민간부문의 금융접근 제한, 저금리로 인한 과잉투자,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우발채무 증가, 금융구조의 복잡성에 대한 대응 미비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할 우려

## 나. 성장 잠재력

### □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저렴한 노동력과 각종 투자유인책을 바탕으로 한 생산요소 투입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 세계 1위 제조업 생산국, 세계 1위 수출국, 세계 2위 수입국으로 성장함. 그러나 고성장(연평균 9.9%)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오염, 빈부 및 지역간 격차, 중복 과잉투자 등이 발생함에 따라 성장방식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
- 이에 중국 정부는 국부 중심에서 민부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목표를 수정하고, 투자와 수출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방식을 전환함. 이를 위해 성장률 목표치를 연 10%이상에서 연 7%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상품 고도화 추진, 국유부문 독과점 해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쟁 도입 등을 포함한 개혁 계획을 수립

### □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7대전략산업 선정

- 중국정부는 중진국을 넘어 고소득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 장비제조 산업, 신에너지 산업, 신소재 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 7개 전략산업을 선정

- '12.5월 국무원이 <12.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승인하고, 20개 세부 프로젝트도 마련
- 현재 전략적 신흥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15년 8%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

#### □ 중복·과잉투자 막기 위한 산업구조조정 추진

- 중국정부는 2013년 1월 <주요 업종 기업합병 구조조정 추진 지도의견>을 통해 초과공급 상태인 9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대상 업종은 자동차, 철강, 시멘트, 선박, 전기분해알루미늄, 희토류, IT, 의약, 농업 등 9개 분야로, 위 업종들은 소규모 기업들이 난립하여 전문화 수준이 낮고 생산 구조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
-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당 산업 인수합병(M&A)으로 기업체 수를 줄이고, 대기업을 육성하기로 함. 산업별로 10대 기업의 목표 산업집중도는 자동차 80%, 철강 60%, 시멘트 35%, 선박 70%, 의약 50% 등

### 다. 정책성과

#### □ 신속하고 유연한 재정 및 통화정책 운영으로 목표 성장률(7.5%) 달성

- 대외수요 악화로 '12년 2분기 성장률이 급감하자 중국정부는 금리인하, 소비보조금 지급, 인프라투자 조기승인 등 부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성장둔화에 대비

\* 분기별 성장률(%): 8.1 ('12. 1/4) → 7.6 (2/4) → 7.4 (3/4) → 7.9 (4/4)

- (통화정책) '12년 연간 세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총 150 bp), 두 차례에 걸친 기준 금리 인하(총 대출 금리 56bp, 예금금리 50bp)를 단행
- (소비촉진책) '12년 가전, 자동차 등 에너지절감 제품 구입에 대한 소비보조금 지급, 농촌지역의 가전제품 구입에 대한 소비보조금('07.12~'13.1) 지급 등을 실시하였으며, '13.1월 생활, 의료, 제조장비, 친환경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등의 추가 소비촉진책을 발표

- (투자촉진책) '12년 철도, 풍력발전소, 공항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승인(총 1조 위안 규모)하였으며, 지방정부도 각종 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

#### □ 해외투자촉진 정책으로 국제수지 불균형 완화

- 중국정부가 2000년부터 해외시장개척, 자원 확보 및 외환보유고 관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11년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51.4%까지 성장
- 특히 '12년에는 자본수지가 1,173억 달러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1,931억 달러에 달한 경상수지 흑자를 상쇄하여 국제수지 불균형을 완화함. 이에 따라 외환화 절상 압박이 완화되고, 외환 보유고 증가속도도 둔화

### 3. 대외거래

#### □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적자증가로, '12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2.3%로 감소

- '12년 상품수지 흑자 증가에도, 서비스수지·소득수지 적자 증가, 이전수지 흑자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4.3% 감소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2.3%로 감소
  - (상품수지) '12년 대외수요 개선으로, 유럽을 제외한 미국, 아세안 수출이 회복되면서 수출이 크게 증가(2,425억 달러 → 3,216억 달러)
  - (서비스수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해외여행 급증, 법률, 서비스 등의 고급 서비스수요 증가로 898억 달러 적자 기록
  - (소득수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투자에 대한 배당, 이자 등의 대외지급으로 422억 달러의 대규모 적자 기록
  - (이전수지) 북한, 아프리카 등으로의 원조 증가에 따른 이전 지출 증가로 흑자가 35억 달러로 감소



- '13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상품수지는 3,222억 달러로 '12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898억 달러→ 1,175억 달러)로 GDP 대비 1.7%로 감소할 전망이다(1,931억 달러 → 1,596억 달러)

□ 총 외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으로 외채상환능력이 양호

- '12년 말 총 외채잔액이 8,732억 달러(GDP의 10.6%, 총 수출의 36.4%)로 비교적 많은 편

- GDP대비 총외채가 '09년 8.6%에서 '12년 10.6%로 증가하였으며, 총수출과 비교했을 때도 '09년 30.0%에서 '12년 36.4%로 증가 추세

- 그러나 중국은 외환보유액이 세계 최고 수준(3조 3,050억 달러)으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15.8%('11)에 불과하고, DSR도 3.1%로 낮아 단기 유동성 위험이 낮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경 상 수 지   | 412,364   | 261,120   | 305,374   | 201,714   | 193,100   |
| 경상수지/GDP  | 9.1       | 5.2       | 5.2       | 2.8       | 2.3       |
| 상 품 수 지   | 360,680   | 249,513   | 254,420   | 242,469   | 321,600   |
| 수 출       | 1,434,600 | 1,203,800 | 1,581,420 | 1,812,319 | 2,056,900 |
| 수 입       | 1,073,920 | 954,287   | 1,327,240 | 1,569,850 | 1,735,300 |
| 외 환 보 유 액 | 1,946,030 | 2,399,150 | 2,847,340 | 3,181,150 | 3,305,000 |
| 총 외 채 잔 액 | 390,200   | 428,700   | 548,900   | 693,800   | 873,200   |
| 총외채잔액/GDP | 8.6       | 8.6       | 9.3       | 9.5       | 10.6      |
| D S R     | 2.0       | 2.9       | 2.4       | 2.8       | 3.1       |

자료: IFS, EIU.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 안정

##### □ '12년 말 지도부 교체에도 정치적 안정은 지속

- '12.11월 공산당 제18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교체가 단행됨. 시진핑 국가 부주석과 리커창 부총리가 예정대로 각각 국가 주석과 총리에 올랐으며, 나머지 5명의 상무위원도 합의하에 선출된 만큼 현재까지 지도부 교체로 인한 정국혼란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나머지 상무위원이 17기 정치국원 중 연장자 순으로 채워짐에 따라 신 지도부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위한 경제체제 및 구조개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이 잠재적 불안요인

- 외형상의 정치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도농간 소득격차, 산업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가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분석됨. 국가통계국은 '12.4분기까지 도시지역 실업률을 10분기 연속 4.1%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농촌지역 거주자와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실업률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

##### □ 정부 관료의 비리문제가 아직도 심각

- 중국정부는 비리척결을 위해 '10년 '반부패와 청렴정치 건설백서'를 발간 하였으며,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도 11월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 관료주의 타파와 부패 척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등 부패와의 전쟁을 지속
- '10년부터 2년동안 3,578명의 관리를 처벌하였으나, 부패와의 전쟁을 지휘하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가 비리혐의로 공직을 박탈당하는 등 여전히 정부 관료의 비리문제가 심각하여 사회적 불만이 상승

- '12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비리인식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평가대상국 183개국 중 75위

□ 산발적인 소수민족 독립운동 발생에도 대규모 사회불안 가능성은 희박

- '08~09년 종교탄압과 소수민족 차별에 반발하여 발생한 티벳족과 위구르족의 시위가 진압된 이후 대규모 시위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11.7월 신장 위구르족의 파출소 습격 사건 진압과정에서 위구르족 14명이 사망하고, '12년 종교의 자유를 위한 티벳족 시위 진압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는 등 소규모 유혈사태는 지속적으로 발생
- 시위가 대도시가 아닌 교외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직적인 반정부 시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체제전복 가능성은 미미함.
- 중국정부는 시위 발생 시 강경진압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등의 미디어 통제를 강화하고 시위 발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는 등 회유책도 함께 실시

### 3. 국제관계

□ 산업 보호, 경기침체 타개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미국, EU와의 무역갈등 지속

- '11.11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국 간 무역갈등이 재연됨.
- 중국정부와 기업들이 보조금 조사에 불응하자 미국은 중국 정부 및 기업들을 WTO에 제소하였으며, 중국산 닭고기, 철강실린더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함.
- 이에 '12.7월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이 이를 다시 불공정 무역행위로 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간 무역갈등이 심화됨.

- '12.9월 EU가 중국산 태양 전지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11월에는 중국이 오히려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이 태양 전지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하면서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 역내 영향력을 높이려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

- 중국은 '10.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FTA를 통한 경제통합을 구상해왔으나,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을 주도하고,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이에 참여할 뜻을 밝힘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 전략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
- 특히 미국은 일본, 캐나다, 한국 등과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확립과 환율 조작 금지 등 중국을 겨냥한 의무규정을 내세우며 중국에는 적극적인 참여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향후 중국이 가입하더라도 미국이 TPPA를 중국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TPPA는 '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으로 출범하여 '10년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등 5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필리핀, 한국, 대만의 참여 희망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은 다소 완화

- '13년 4월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정책보고서는 94년 이후 19년 연속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음.
- 또한, 2010년 환율 개혁 이후 '13년 4월까지 실질환율이 16.2% 절상된 점,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07년 GDP의 10.1%에서 '12년 2.3%까지 감소한 점 등을 바탕으로 그간 위안화 절상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는 등 위안화 절상 압박수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됨.
- 그러나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여전히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미국 상원에서 6월 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10년, '11년에 이어 올해에도 환율조작국 규제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는 등 환율문제가 양국간 분쟁의 불씨로 잠재해 있음.

## □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

- '12.4월 도쿄도가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5개 섬 가운데 3개 섬을 매입할 계획을 발표하고 7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국유화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대만정부가 크게 반발함. 현재 3개 섬은 일본 국적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임대료를 내고 빌리는 식으로 실효지배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음.
-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 추진에 '12.8월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반일시위가 발생하고 도요타, 유니클로 등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됨. 일본에서도 반중시위가 발발하고 10월에는 일본에서 개최된 IMF/WB 연차총회에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재정부장(재무장관)이 불참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
- '12.12월 일본 총선에서 영토분쟁에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자민당이 집권함에 따라 영토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 자민당은 센카쿠 열도에 공무원 상주, 다케시마의 날 국가 공식행사로 지정 등을 공약

## □ 대만과의 관계는 마잉주 총통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 '08년 대만 총통으로 당선된 마잉주가 '12년 1월 선거에서 다시 승리함으로써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될 전망
- '10.7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PA)이 체결된 이후 대만제품과 서비스의 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통합이 가속화
- 대만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QDII 한도를 두 배로 확대(5억 달러 → 10억 달러)하고, 대만 투자기관에도 RQFII(적격 위안화 외국인기관투자자)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

## □ 러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원외교 활발

- 러시아와 '08.10월 국경분쟁을 타결한 이후 '10.9월 국경을 통과하는 송유관 개통으로 우호관계 확대

- 중국은 대아프리카 자원외교도 활발히 추진하여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의 전체교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4%)은 미미하지만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
- 중국은 아프리카 내 중국의 정치영향력을 확대하여 주요 자원개발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아프리카 포럼(FOCAC)을 3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으며, '12.7월 5차 포럼에서 중국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200억 달러의 차관 지원, '중국-아프리카개발펀드'를 50억 불까지 확대, 아프리카의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품목을 전체의 97%까지 확대 등을 약속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중국은 리스케줄링, 연체경험이 없으며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외국인의 자본시장 투자 및 자국민의 해외차입 규제로 외환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외화 유출과 이에 따른 외채상환 불능사태 가능성은 미미

### 2. 국제시장 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높은 신용등급 유지

- 중국은 고도성장, 풍부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등으로 매우 높은 국가신인도 유지

- OECD 2등급; S&P AA-/stable; Moodys Aa3/positive; Fitch A+/stable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USEXIM) : 전액인수 가능
- 영국(ECBD) : 전액인수 가능
- 독일(Hermes) : 단기 전액인수 가능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 종전 평가 등급 |         |
|---------|----------|---------|----------|---------|
| 수출입은행   | B1       | 2012.08 | B1       | 2012.02 |
| OECD    | 2등급      | 2012.03 | 2등급      | 2011.03 |
| S&P     | AA-      | 2010.12 | A+       | 2008.07 |
| Moody's | Aa3      | 2010.11 | A1       | 2007.07 |
| Fitch   | A+       | 2012.04 | A+       | 2011.04 |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8월 24일(북한과는 1949년 10월 6일)
- **주요협정:** 무역, 투자협정(1992년), 문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원자력협정, 세관협력협정(1995년), 복수사증협정(1998년), 투자 증진 및 보호협정(2007년)
- **중국의 수출부진과 성장둔화에도 상품수지 흑자는 유지**
  - '12년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1,343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대중국 수출(평균 23.0%)이 0.1% 증가하는 데 그침.
  - 이는 수출품이 중국에서 가공되어 재수출되는 수출구조에 따라 중국의 수출부진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끼친 데다 중국의 성장둔화로 수입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임.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08억 달러로, 전년대비 6.5% 감소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2년 중국과의 교역에서 5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표 4> 한·중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대 중국 | 2010    | 2011    | 2012    | 주요품목                    |
|------|---------|---------|---------|-------------------------|
| 수 출  | 116,838 | 134,205 | 134,331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합성수지 |
| 수 입  | 71,574  | 86,426  | 80,778  | 반도체, 컴퓨터, 철강관           |
| 합 계  | 177,412 | 220,631 | 215,109 |                         |

자료: 한국무역협회.

## □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투자대상국

- 2012년 말 우리나라의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405억 달러이며, 2012년 연중 투자금액은 33억 달러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 (전체투자의 14.3%)임.
-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2011년 투자건수가 전년 대비 6.5% 감소하고, 투자액도 전년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12년에는 투자건수가 15.9%, 투자액은 10.3% 감소함.
  - 이는 제조업 분야 임금상승, 외국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폐지,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폐지·축소 등으로 비용 인상요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2012년 기준 업종별로 제조업이 총투자금액의 69.6%로 가장 많고, 이어 부동산·임대업이 18.6%를 차지함.

## VI. 종합 의견

- '12년 미국, EU 등의 경기침체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에도 소매판매 증가, 고정자산 투자증가, 산업생산 증가, 적극적인 정부지출 등으로 7.8% 성장을 달성함. '13년에도 성장률 부양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견고한 소비가 성장을 주도해 7.8% 성장할 전망이다.
- 정치적으로 지역간, 도농간 소득격차, 부정부패, 소수민족의 독립요구 등 사회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중국 정부가 사회복지 제도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최저임금 인상 및 균형발전전략 수립 등을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풍부한 외환보유액과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바탕으로 외채 상환불능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앞으로도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신용도 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B1으로 유지하고자 함.

조사역 강 수 연 (☎02-3779-5716)

E-mail: sykang@koreaexim.go.kr